4 경제 협력 역량 강화



제1절 G20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강화 외교 220

제2절 에너지 · 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 · 환경 외교 229

제3절 양자 경제 외교 239

제4절 다자 경제 외교 263



DIPLOMATIC WHITE PAPER

제 1 절

G20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강화 외교

1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참석

제9차 G20 정상회의가 2014년 11월 15~16일 이틀 동안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회복의 속도와 고용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세계경제의 성장세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정상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G20 정상들은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 '국제제도 분야의 협력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 투자, 무역, 개발, 금융, 조세, 에너지, 기후변화 등 G20의 분야별 정책 공조 방향을 논의하고 '정상선언문' 및 12개의 부속서를 결과물로 채택하였다. 또한 에볼라 문제의 심각성을 고

려하여 에볼라 대응을 위한 G20의 공조 의지를 담은 'G20 정상성명서'를 별도로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G20 회원국의 무역, 투자, 고용, 경쟁 분야 등에서의 성장전략을 집대성한 'G20 종합적 성장전략' 마련을 들 수 있다. 성장전략이 예정대로 이행될 경우 2018년 G20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현 추세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20 정상들은 또한 성장에 필수인 양질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다년 계획인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 를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G20 차원의 한시 이행 기구인 '글로벌 인프라 허브' 설립에 합의하였다. 한편 고용 분야에서는 여성 노동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녀 간 노동시장 참여율 격차를 국별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2025년까지 25% 감소하기로 하였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래 G20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개발 분야에서는 저소득 국가의 개발 재원 조성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국제송금 비용을 5% 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유엔의 Post-2015 개발 의제 관련 논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지지를 천명하였다.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그림자 금융 규제안 마련 등 금융규제 개혁의 지속 이행에 합의하고 역외 조세회피 대응 방안 마련에도 진전을 이루었다. 이 밖에 G20 정상들은 무역, 금융,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다짐하였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을 통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시장 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에너지 협력 관련 G20 주요 원칙에도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가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논의 진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을 소개하고 '창조경제'를 G20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규제 개혁이 미흡한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규제 현황 연구를 관련 국제기구에 요청하였다. 또한 선진국 통화정책 등 글로벌 위험 요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각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은 G20에서 '개발' 의제의 중요성도 재차 환기하였다. '개발'을 2015년 터키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을 제안, 개발 의제 주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을 위한 G20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을 위한 G20의 협력도 촉구하였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Salman bin Abdulaziz) 왕세제와 양자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존 키(John Key) 뉴질랜드 총리와는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AT)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주요 국제 경제 이슈를 망라하여 논의하는 등 국제 경제 협력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G20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의제 논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안정된 세계 경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활동

OECD는 세계 경제 성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이래 OECD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OECD 각료이사회, OECD 동남아 지역포럼, OECD 개발센터 주간 및 글로벌 전략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OECD에서 우리의 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인 사회(Resilient Economies and Inclusive Societies)'라는 주제 아래 5월 6~7일 이틀 동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개발'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 개발 목표 달성 수단으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 활용을 제안하고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빈곤 퇴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출범한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의 성공 이행을 위해 협력 의

사를 표명하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은 '무역' 세션에서 FTA 체결을 통한 무역 · 투자 자유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적극 활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노력을 설명하였다. 한편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복원력 있는 경제' 세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 개혁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동남아 지역 포럼, OECD 개발센터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이후 제도 선진화 노력 및 경제 발전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는 등 OECD 내 개발 관련 논의에 적극 기여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OECD 내 제반 분야의 논의를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 추진에 계속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발전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로 OECD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견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3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활동

유엔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아 · 태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로, 역내 경제 · 사회 분야 개발 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 · 태 지역의 경제 · 사회 개발을 위한 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ESCAP 동북아사무소(2010년 설립, 인천 송도) 및 유엔아시아 · 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APCICT: 2006년 설립, 인천 송도)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014년 8월 4~8일 태국 방콕에서 62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역내 연결성(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개최된 제70차 ESCAP 총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조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아 · 태 지역 연계성 강화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여와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ESCAP 차원에서 최근 우리 주도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 이니셔티브' 및 '서류 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 체결 노력을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 ESCAP 활동을 소개하였다. 조 차관은 또한 샴샤드 아크타르(Shamshad Akhtar) ESCAP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ESCAP 최대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기여, 대북협력사업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진행 등 한 · ESCAP 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아크타르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ESCAP 정회원국 가입(1954.10.20) 60주년을 맞아 윤병세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014년 10월 19~24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였다. 윤 장관과 아크타르 사무총장은 한 · ESCAP 협력 관계가 지속 심화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측이 아 · 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창조경제 등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 · 태 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시행 시범사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아 · 태 지역 고등교육기관 학습 모델 개발 및 재난위험 관리를 위한 ICT 활용 프로젝트,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정부 역량 강화 사업 등 ESCAP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ESCAP 활동을 통해 아 · 태 지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4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참석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 총회(일명 '다보스포럼')는 각국의 정 · 관 · 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당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2014년 다보스포럼은 1월 22~25일 '세계의 재편: 정치, 기업, 사회에 대한 영향(The Reshaping of the World: Consequences for Politics, Business and Society)'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여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전체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창조경제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등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을 위한 다보스포럼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에 남북통일은 북한 주민 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통일 대박론 설명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크게 제고하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에 참석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서의 한국의 경제 ·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한국에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시스코, 퀄컴, 지멘스, 아람코의 CEO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5 보아오 포럼 참석

제13차 보아오 포럼이 2014년 4월 8~11일 중국 하이난다오에서 개최되었다. 2001년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며 출범한 보아오 포럼은 2002년 이래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간포럼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의 정홍원 총리를 비롯해 리커창 중국 총리 및 토니 애벗 호주 총리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 재계 및 학계 인사, 언론인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의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 총리는 10일 개최된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시아가 비약 발전을 달성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및 소득불균형, 환경오염 등 각종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통일한국은 아시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에 미칠 이로운 측면을 소개하였다.

한편 정 총리는 포럼 개막식 후에 리커창 총리와 한 · 중 총리회담을 갖고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등 현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 총리의 보아오 포럼 참석은 한 · 중 우호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과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 2 절

에너지 · 자원 협력 및 녹색성장 · 환경 외교

1 에너지 · 자원 협력

1) 에너지 협력 외교 적극 전개

외교부는 2014년 10월 방한한 빌럼 알렉산더르(Willem Alexander) 네덜란드 국왕과 박근혜 대통령 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델프트 공대 연구용 원자로 개선 사업인 오이스터(OYSTER)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 성사시킴으로써 에너지 협력 외교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인도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 · 인도 원자력 정기협의회 개최에 합의한 이후 12월에 뭄바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원자력 분야 양자 협

력을 꾸준히 강화하였다.

외교부는 2021 세계가스총회(WGC) 대구 유치를 위해 2014년 3월 'GASTCH VIP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 유치국이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제가스연맹(IG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적극 전개, 그 결과 회의 유치와 2018~2021년 국제가스연맹 회장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11월에는 원전 수출 유망 대상국 20여 개국의 외교단을 초청한 가운데 '제3차 원전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12월에는 자원 부국 고위급 정책관료 등을 초청, '제4차 국제에너지협력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대외 에너지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원 부국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하였다.

2)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 · 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TRM+)'을 조직하고 이를 개최하는 등 역할을 적극 전개하였다. 한 · 일 · 중 3국은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6차 한 · 중 · 일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기존 회원국 외 동북아 여타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 형태의 TRM+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2014년 9월 일본에서 개최된 1차 TRM+회의에 이어 11월 서울에서 원자력안전 분야 관 · 학 · 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TRM+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제2차 회의는 TRM+회

의의 정기 개최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에너지안보 관련 역내국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제5차 태평양 에너지 서밋(Pacific Energy Summit)'(6월),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12월) 등을 개최하여 에너지안보 주요 이슈에 관한 다각도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동북아 가스트레이딩허브 심포지엄'(3월), 'GASTECH 계기 VIP 프로그램 및 아시아 가스 가격 저감을 위한 동북아 5개국 협의'(3월), '동북아 오일허브 심포지엄'(6월) 개최 등으로 에너지 자원별 협력 논의 진전에도 기여하였다.

3) 국제에너지기구에서의 협력 주도

외교부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IRENA 총회 및 이사회(1월, 6월, 11월) 참여를 통해서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 논의를 주도, 한국이 IRENA의 제3대 이사국으로 선임(2016년 임기)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IEA 글로벌에너지대화상설그룹회의'(5월, 9월) 및 'IEA 이사회'(10월), '인도 첸나이 재생에너지포럼'(9월), '제128차 및 129차 OECD/NEA 운영위원회'(4월, 10월), '국제가스연맹 연차총회'(10월) 등 에너지 관련 지역 및 다자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협력 저변을 확대하였다.

4)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통한 민 · 관 에너지 협력 강화

에너지프로젝트중점관리공관과 에너지보좌관 등 재외공관의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계속되었다. 주요 자원 부국 및 신흥 에너지 시장에 위치한 50개 에너지프로젝트중점관리공관은 주재국과 에너지 · 자원 행사 공동 개최, 현지 에너지자원 동향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 자원 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외교부 내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는 국내 에너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데 기여하였다. GECC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한 최신 에너지자원 정보를 '일일/특집 국제에너지자원동향', '국제에너지자원입찰정보'로 작성하여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 및 유관 기관 · 협회 등 약 3,000여 관계자들에게 제공하였다(2014년 일일동향 140회, 특집동향 23회, 입찰정보 37건 제공).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및 유관기관들과의 직접 면담과 유 · 무선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외국 에너지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조성, 상호 교류에도 기여하였다.

2 지속 가능 발전 · 녹색성장 외교

지속 가능 발전은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여 왔다.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의 의미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과 개발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발전의 개념으로 확인되고 확산되었다.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

상회의(Rio+20)'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의 3대 축인 경제 · 사회 · 환경 지속가능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참가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출을 위한 국가 간 프로세스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목표 공개작업반(SDGs Open Working Group) ▲지속가능발전 재원 전문가 회의(ICESDF: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이 설치, 운영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 SDGs 공개작업반은 2013년 3월부터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7월에 총 17개 목표[1]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SDG 보고서를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엔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2015년에 개시된 'Post 2015 개발어젠다' 정부 간 협상 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ICESDF도 2013년 8월~2014년 8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CESDF는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 발전 재원으로 국내 공공재원, 국내 사적재원, 국제 공공재원, 국제 사적재원, 혼합재원(blended finance) 등을 제시하고 재원별 특성과 동원(mobilization)방안 및 정책 제언 등을 기술하였다. 2014년에는 제2차 HLPF 각료급회의(7.7~9, 미국 뉴욕)가 개최됨으로써 Post-2015 개발어젠다 논의 진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제공하였다. 12월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를 총점검하고 ▲Post-2015 정부 간 협상의 방향을 제시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2]를 발표하였다. 반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Post-2015 의제 설정을 위한 6가지 필수 요소로 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을 제안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관련 유엔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 교육

1) 'SDG 공개작업반 보고서'上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빈곤퇴치, 기아와 농업, 교육, 보건,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 산업화, 지속가능도시, 지속가능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자원 · 대양 · 바다, 생물다양성 · 생태계, 평화 · 제도,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2)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제목: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는 ①서문 ②MDGs 이행 및 Post 2015 프로세스의 교훈 ③의제 수립 ④이행수단(재원/기술 등) ⑤책임성 문제(모니터링/점검 등) ⑥결어로 구성

및 발전 경험 공유 등 기존의 관심 주제 이외에도 물 · 에너지 · 기후변화 · 글로벌 파트너십 등 새로운 관심 의제를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지속 가능 발전 관련 국제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논의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ESCAP, OECD 등에서도 적극 참여 또는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ESCAP 아 · 태 지역 지속가능발전 포럼(5.19~20, 태국), EAS 동아시아 저탄소 파트너십 대화(10.30~31, 일본), OECD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포럼 등을 참여 또는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본격 전개될 지속 가능 발전 논의에 우리 정부의 관심 의제 및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의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현재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몽골 등 20개 개발도상국에서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4월 이보 더 부르(Yvo de Boer) 신임 사무총장(전 UNFCCC 사무총장) 및 11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이사회 및 총회 의장(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 등 GGGI 지도부가 교체됨으로써 이 기구의 국제 인지도가 제고되었다. 우리 정부는 GGGI 회의 참석 및 사무국, 회원국과의 수시 업무 협의를 통해 GGGI 관련 제반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GGI 중장기 전략계획(2015~2020) 도출을 위한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저소득국 지원, 녹색투자사업 강화, 조직효율성 제고 등을 중장기 전략계획에 반영시켰다. 각종 양자회담, 공동위, 국제회의 등 주요 외교행사 때에는 GGGI 가입 및 기여를

권유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 피지, 요르단, 바누아투, 세네갈이 GGGI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회원국 수가 총 2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1월에는 영국이 3년간 1,480만 파운드(2,300만 달러 상당)를 공여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GGGI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독립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덴마크 등 주요 녹색성장 파트너와의 양자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는 2011년 최초의 가치 동맹인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을 출범시키고 매년 녹색성장동맹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4년 3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4차 한 · 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한국 외교부 차관–덴마크 통상개발협력장관)에서는 양국 기업 및 기관 간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8개 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녹색기술 연구 및 응용 관련 양국 기업 · 연구기관의 높은 관심과 향후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10월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4차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3GF)에는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이 참석, 녹색성장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구와 경주에서 2015년 4월 개최 예정의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 행사인 '제7차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의 성공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물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외교부는 이 포럼의 정치적 과정을 담당하여 행정부, 의회, 지방정부 차원에서 물 문제 해결 방안을 결집, 물 분야 협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 정부는 환경부 및 유관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신흥 유망시장 및 민간 차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물 · 환경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당국과의 환경 분

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가 보유한 물 · 환경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동유럽 지역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상담 건수 총 563건, 상담액 총 15억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10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 · 중동 물 · 환경 포럼을 개최, 우리 물 · 환경 산업의 중동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3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

우리나라는 12월 1~14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를 비롯하여 유엔기후정상회의, 주요경제국포럼(MEF), 피터스버그 기후변화 대화, 카르타헤나 기후변화 대화 등 주요 공식 및 비공식 기후변화 협상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선진국 ·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20년 이후 신기후변화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 진전에 기여하였다.

2020년 이후 신기후변화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로, 2012년에 신기후변화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2014년 9월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유엔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신기후변화체제 협상의 타결 성공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최대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앞장서서 제시, GCF의 초기 재원 조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GCF는 30여 개국으로부터 약 102억 달러 규모의 초기 재원을 확보하였다.

GCF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활동을 본격 개시할 경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재정 메커니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환경 협력 강화

1) 동북아 지역 환경 협력

동북아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빠른 경제 성장, 국가 간 지리상의 인접성으로 인해 황사 · 산성비 ·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지역보다 증대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 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 · 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 · 러시아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환경정책 및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대기 및 해양오염문제, 기후변화 대응, 해양쓰레기 대책, 생물다양성,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이 참여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통해 황사, 대기 및 해양 오염, 생태계 보전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관해 매년 논의해 오고 있다. 2014년 9월 22~23일 이틀 동안 러시아 모

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 연구기관 간 오염물질 이동 모델링 작업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제20차 회의에서 채택될 전략 비전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 · 중 · 일 ·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4개국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정부 간 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생물 다양성 보전, 유류오염 방제, 해양쓰레기 저감 등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 국제 환경 협력 강화

범지구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생태계, 해양, 유해폐기물 및 화학 물질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환경 관련 국제협약들이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태계 분야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습지 보전을 위한 람사르(Ramsar) 협약과 화학 및 폐기물 분야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유해화학물질 사전 승인 통보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주요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폐기물의 국제 관리 등 전 지구 차원의 환경 이슈 논의 및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0월 6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강원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제 3 절

양자 경제 외교



1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

1) 한 · 중 경제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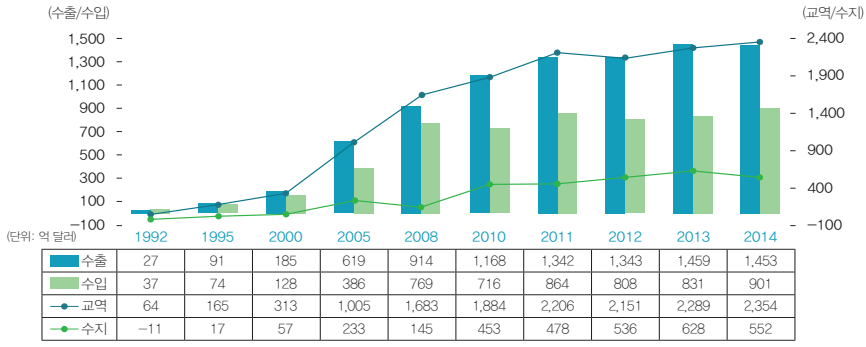
한 · 중 경제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비약 발전하였다. 중국은 2002년부터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 대상국이며,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및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한 · 중 교역 규모는 양국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해 왔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액은 2011년 2,206억 달러로 증가, 수교 20년 만에 교역 규모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14년 양국 교역액도 2,354억 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1)]

1)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이다. 한국은 중국에 있어 홍콩 제외 시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1위로 제3위 교역 상대국이다.

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3,0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 한 · 중 간 교역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 한 · 중 수교 이후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1992	1995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27	91	185	619	914	1,168	1,342	1,343	1,459	1,453
수입	37	74	128	386	769	716	864	808	831	901
교역	64	165	313	1,005	1,683	1,884	2,206	2,151	2,289	2,354
수지	−11	17	57	233	145	453	478	536	628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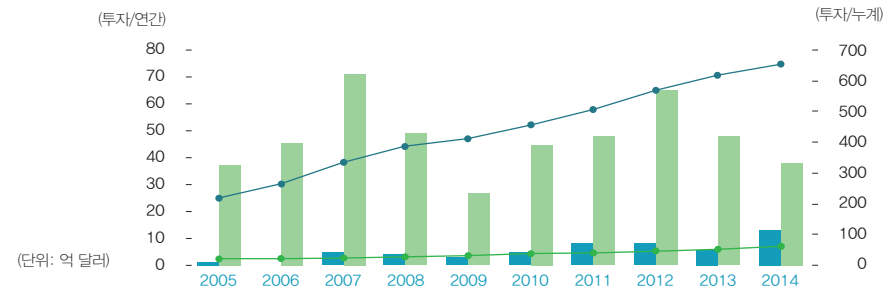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대중국 누적 투자액은 1968~2014년 655억 달러에 이르며, 2014년 투자액은 37억 5,000만 달러이다. 한편 1962~2014년 중국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61억 달러이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진출 촉진(走出去) 정책과 우리나라의 중국 자본에 대한 투자 유치 적극 노력으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한 · 중 양국은 핵안보 정상회의(3.24~25, 네덜란드 헤이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7.3~4, 서울), 아 · 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10~11, 베이징)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위안화

활용도 제고, 교역 · 투자 등 경제 협력 확대를 포함한 양국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금융 및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방한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역내 지역경제 통합 촉진을 위해 한 · 중 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하고 11월 10일 한 · 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 · 중 FTA 체결은 중국 시장에의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촉진 및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년간 한 · 중 간 투자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한 투자	1	0	4	3	2	4	7	7	5	12
대중 투자	37	45	71	49	27	44	48	65	48	38
대한 투자(누계)	18	18	22	25	27	31	37	45	49	61
대중 투자(누계)	218	263	334	383	410	454	502	567	616	65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편 양국 경제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통상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정상회담은 물론 장관급 협의 채널과 차관급 경제공동위원회, 품질감독검사검역협의체 및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등 다양한 양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

여 통상 현안을 원만히 관리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제20차 한 · 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2014.4.21, 서울)에서는 전년 회의 결과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이 직면한 새로운 경제 여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 협력 정례화, 한 · 중 녹색산업 협력 포럼 정례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등 신규 협력 사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 내 주재원 거류증 및 취업비자 절차 등 양측 기업 애로 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관 부처 간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이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또한 제20차 한 · 중 경제공동위원회(2014.12.23, 산둥성 옌타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2014.7) 때 양국 정상이 합의한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금융 협력, 한 · 중 FTA 연내 타결 등 경제 분야 합의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중 FTA 체결 이후의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서의 비전문서를 공동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과의 복합물류 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가능성 모색, 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 논의, 기업 애로 사항 등 양측 관심 사항도 지속 검토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 확대 및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지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한 · 동북3성(랴오닝 · 지린 · 헤이룽장) 경제협력 포럼(7.18, 선양), 한 · 후베이성 산 · 관 · 학 경제협력 포럼(7.9~10, 우한), 한 · 중 우호주간 행사(6.4~6, 충칭) 등을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교역 · 투자 관계 확대와 통상 마찰 예방을 위해 지속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 한 · 일 경제 외교

한 · 일 경제 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양국 간 교역액은 1965년 2억 2,0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11년 1,0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재 양국은 서로에게 제3위 교역 상대국[2]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경기 침체 탈피를 위한 아베노믹스 정책[3]을 추진, 이로 인해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엔저 현상과 한 · 일 관계 침체 등의 복합 작용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은 2012년 389억 달러에서 2013년 347억 달러, 2014년 32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전체 교역 규모 또한 2012년 1,032억 달러에서 2013년 947억 달러, 2014년 860억 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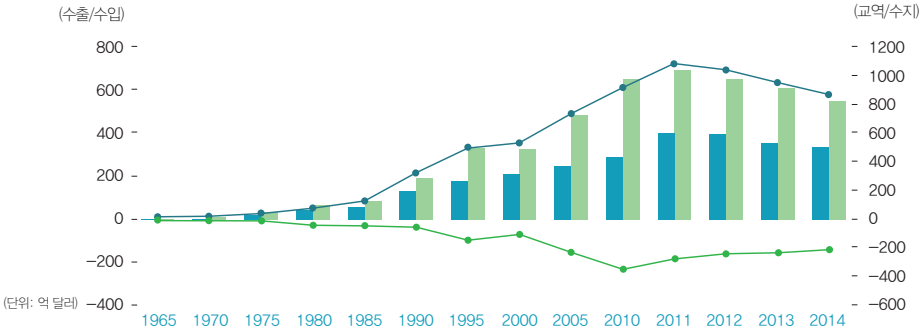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 번도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였다. 2010년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3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일본 내 주요 부품 · 소재 공급 체계의 교란 등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2013년 253억 달러, 2014년 216억 달러 등 무역적자액은 4년 연속 감소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일본 무역적자를 지속 감소시키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며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무역적자 비중이 큰 부품 · 소재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

2)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은 우리의 수출 대상국 3위, 수입 대상국 2위로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 상대국이다. 또 한국은 일본의 수출 대상국 3위, 수입 대상국 7위로서 전체 교역 규모에서 제3위 교역 상대국에 있다.
3)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이다. ①과감한 금융완화 ②신축 운용 재정정책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전략 등 3대 전략으로 일본 경제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있다. 연례로 개최되는 '한 · 일 부품 · 소재 조달공급 상담회'는 양국 부품 · 소재 산업 협력의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상담회는 2014년에도 한국 기업 162개사, 일본 기업 44개사가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등 4개 경제자유구역(FEZ)을 부품 · 소재 전용 공단으로 지정하여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한 · 일 산업 기술페어' 등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1965년 한 · 일 수교 이후 양국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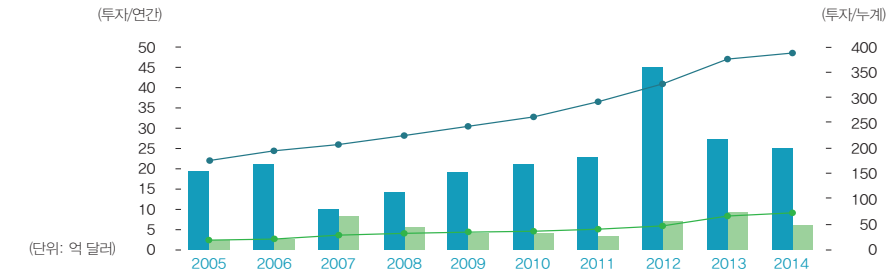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0.4	2	13	30	45	126	170	205	240	282	397	389	347	322
수입	2	8	24	59	76	186	326	318	484	643	683	644	600	538
교역	2	10	37	89	121	312	496	523	724	925	1080	1032	947	860
수지	-1.23	-5.75	-11.41	-28.19	-30.17	-59.36	-155.6	-113.6	-244	-367	-286	-255	-253	-216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편 일본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외국인 투자국이다. 1962~2014년 일본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380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16.0%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07년 이래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우

리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등이 일본 기업에 투자 메리트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의 급증에 대한 반동 및 엔고 현상 완화와 한국의 전력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2014년 대한국 투자는 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10년간 한 · 일 간 투자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한 투자	19	21	10	14	19	21	23	45	27	25
대일 투자	2	3	8	6	4	4	3	7	9	6
대한 투자(누계)	174	195	205	220	239	260	283	328	355	380
대일 투자(누계)	15	18	26	33	37	40	43	49	58	6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 · 일 양국은 경제 · 통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장관급 협의 채널, 차관보급 고위경제협의회, 부국장급 실무협의회 등 양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가운데 양국 기업들의 제3국 공동 진출, 한 · 중 · 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의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 · EU 경제 외교

유럽연합(EU)은 중국 및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파트너이자 EU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제8위 교역 상대국으로, 한 · EU 간 2014년 교역액은 1,141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한 · EU 간 교역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437	485	560	584	466	535	557	494	489	517
수입	273	301	368	400	322	387	474	504	562	624
교역	710	785	928	984	788	922	1032	997	1051	1141
수지	164	184	192	184	144	148	83	−10	−74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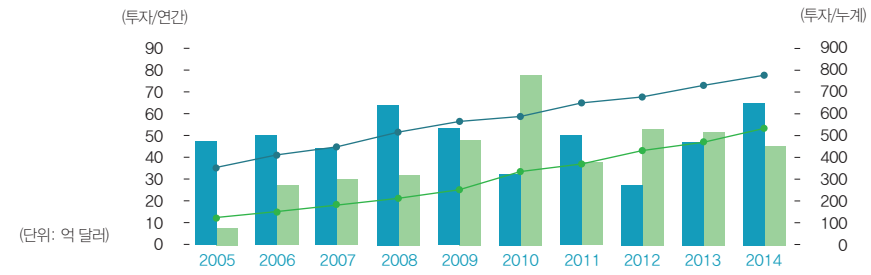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EU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도 한 · EU 교역이 2009년 이후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총 교역액은 2013년에 비해 90억 달러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1,141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교역의 10.4%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51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9.0%를 차지하였

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선박, 승용차,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등이 있다. 한편 대EU 수입액은 62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1.9%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 원유, 의약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부품 등이었다.

또한 EU는 우리나라의 최대 외국인 투자 주체로서 1962~2014년 EU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787억 달러이며, 2014년 대한국 투자액은 2013년에 비해 35.4%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1968~2014년 우리나라의 대EU 누적 투자액은 52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 · EU 간 투자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한 투자	48	50	43	63	53	32	50	27	48	65
대EU 투자	8	28	30	31	49	78	38	53	52	45
대한 투자(누계)	356	405	448	512	565	597	647	674	722	787
대EU 투자(누계)	117	145	175	206	255	334	372	425	476	52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편 1996년에 체결된 한 · EU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한국과 EU는 2001년부터 매년 양자 경제 · 통상 정책 및 현안 등을 협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서울과 벨기

에 브뤼셀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양측은 2014년 11월 26일 브뤼셀에서 제12차 한 · EU 공동위를 개최하여 한 · EU 경제 현황 및 FTA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과학 · 기술, 에너지, 교육, 문화, 지속가능개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공동위원회 등의 정례 협의체 및 수시 협의를 통해 한 · EU 간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 · EU 간 경제 현안을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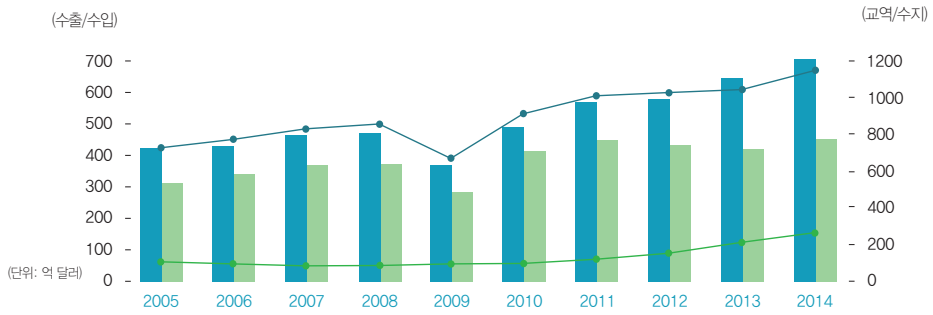
4) 한 · 미 경제 외교

현재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며, 우리는 미국의 제6위 교역상대국이다. 특히 2012년 3월 15일 한 · 미 FTA 발효는 양국 간 교역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한 · 미 교역 규모는 1,156억 달러로 전년(1,036억 달러) 대비 약 11.6% 증가하였다. 2014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70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2.3%를 차지하였다. 수출 품목 가운데에는 승용차,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철강관, 반도체 등이 강세를 보였다. 대미 수입액은 약 453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8.6%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사료, 항공기부품, 가축육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1968~2014년 우리나라의 대미국 누적 투자액이 약 794억 달러로 우리나라 해외 투자 총액(4,000억 달러)의 19.9%를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은 EU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제1위 외국인 투자국으로, 1962~2014년 대한국 누적 투자액이 5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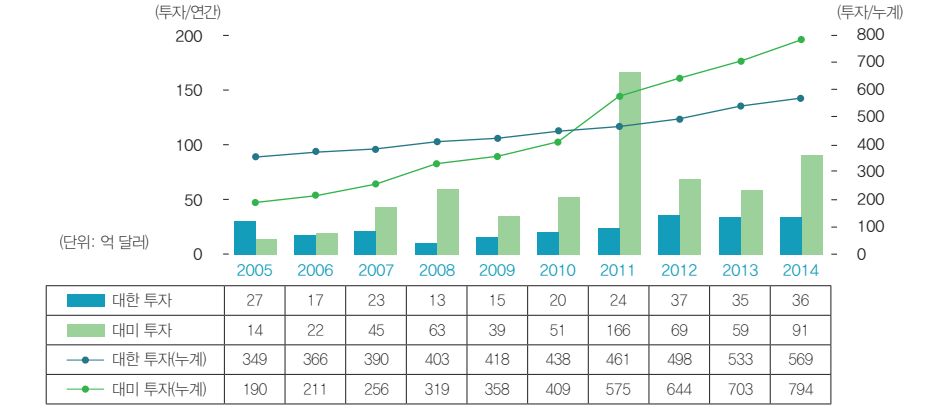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한 · 미 간 교역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413	432	458	464	377	498	562	585	621	703
수입	306	337	372	384	290	404	446	433	415	453
교역	719	768	830	847	667	902	1008	1019	1036	1156
수지	108	95	85	80	86	94	116	152	205	250

출처 한국무역협회

최근 10년간 한 · 미 간 투자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한 투자	27	17	23	13	15	20	24	37	35	36
대미 투자	14	22	45	63	39	51	166	69	59	91
대한 투자(누계)	349	366	390	403	418	438	461	498	533	569
대미 투자(누계)	190	211	256	319	358	409	575	644	703	79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 · 미 교역 및 투자는 절대액을 기준으로 전반에 걸쳐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급속한 교역 확대 및 미국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대미 수출입 비중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비중이 다소 약세임에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보유한 우리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 · 미 FTA를 통해 두 나라는 이미 굳건한 경제 · 통상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의 포괄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수입규제조치 대응

외교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2000년 9월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우리 기업에 대해 부당한 조사 절차나 조치가 있을 경우 외국 규제 당국과의 양자협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규제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를 담은 정부 입장서를 해당국 정부에 제출해 왔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 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 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총 32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

해 누적된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는 총 162건으로 전년(142건) 대비 14%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반덤핑 조치가 120건, 상계관세 조치가 5건, 세이프가드 조치가 37건이었다.

이러한 수입 규제 증가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은 2012년부터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외국의 무역과 관련된 제도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이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책메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전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관세율 인하, 조치 철회 등 22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 사례로는 ▲브라질의 한국산 버스 · 트럭용 타이어 반덤핑 관세 하향 조정 ▲인도의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제재 대상에서 제외 ▲북미 지역 상계조치(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 판정 등이 있다.

특히 브라질의 버스 · 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관세 수준을 낮추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입장서 제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문제 제기 등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에 산출된 관세율(11.5~62.5%)을 하향판정(7.1~39%)함으로써 연간 490만 달러(약 54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의 폴리염화비닐(PVC) 반덤핑 조사의 경우 반덤핑 조사 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 서한 발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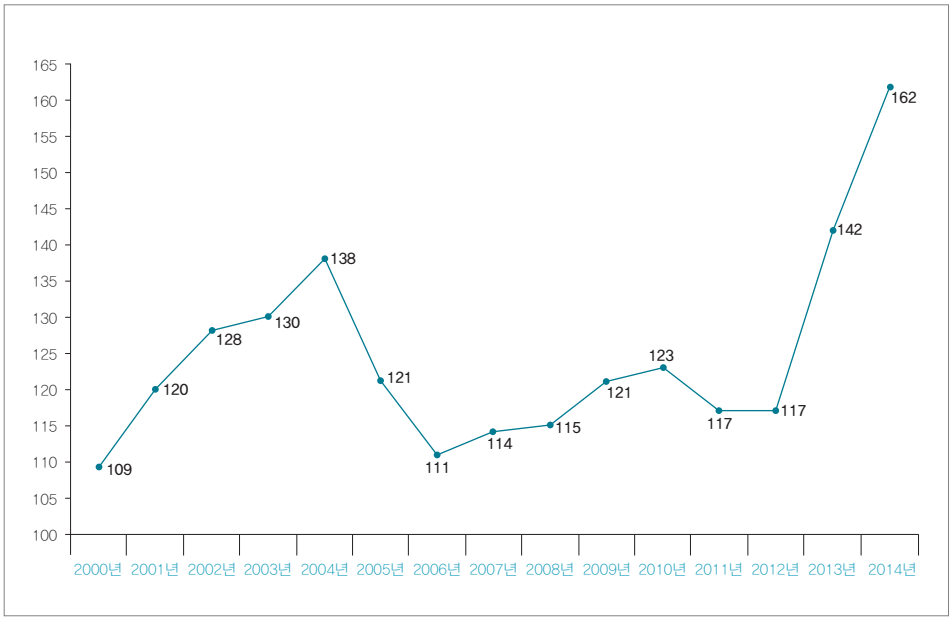
조치로 적극 대응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부과되어 온 반덤핑 관세(8%)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연간 2,400만 달러(264억 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였다.

이러한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약 3억 3,000만 달러(약 3,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 활동

- 수입 규제 조사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 규제 조사 개시 이전, 조사 중, 예비 판정, 확정 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하여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측 대응 논리를 개발
- 수입 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 협의
  - 주요 수입 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하여 정부 간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 2014년 수입규제대책반 파견(8개국, 9회): 호주(2.26, 11.7), 말레이시아(4.9), 터키(5.23), 캐나다(7.31), 브라질(9.26), 인도네시아(10.6), 태국(10.8), 인도(10.27)
- 서한 및 정부입장서 전달
  - 주요 수입 규제 현안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서한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때 수입 규제와 관련된 우리 입장을 피력
  - 2014년 상계조치 정부답변서 23건, 정부입장서 21건, 고위급 서한 5건, 수입규제대책반 8개국(9회) 파견
    ※ 2014년 상계조치 정부답변서 23건, 정부입장서 21건, 고위급 서한 5건 발송

연도별 수입 규제 건수 추이



외국의 대한국 수입 규제 조치 현황

총 162건(조사 중 41건 포함) (2014.12.31.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1. 인도	23(5)	0	8(4)	31(9)
2. 중국	15(0)	0	0	15
3. 미국	15(2)	5(2)	0	20(4)
4. 터키	5(2)**	0	10(3)	15(5)
5. 브라질	12(3)	0	0	12(3)
6. 파키스탄	6	0	0	6
7. 인도네시아	6(1)	0	4(3)	10(4)
8. 호주	9(2)	0	0	9(2)

9. 러시아	1	0	3(1)*	4(1)
10. 태국	4	0	2(1)	6(1)
11. 캐나다	8(2)	0	0	8(2)
12. EU	4(1)**	0	0	4(1)
13. 우크라이나	1	0	3	4
14. 아르헨티나	3(1)	0	0	3(1)
15. 남아공	1	0	0	1
16. 말레이시아	4(3)	0	1(1)	5(4)
17. 멕시코	1	0	0	1
18. 필리핀	0	0	4(2)	4(2)
19. 대만	1	0	0	1
20. 콜롬비아	1	0	2(2)	3(2)
21. 뉴질랜드	0	0	0	0
합계	**120(22)**	**5(2)**	**37(17)**	**162(41)**

※( ) 안은 현재 조사 중인 건수
* 3국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수입 규제 조치 포함
** 우회덤핑 2건 포함

2014년 수입 규제 대응 실적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 USD)	감축된 관세율	연간 포기된 관세액[4] (천 USD)	비고
1	PET (인도네시아)	74,251 (2013)	최종 판정: 4.1~12.2% 대응 후: 0%	9,059	반덤핑 조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
2	PVC(인도)	297,923 (2013)	기타 기업으로 분류 시 재심 전: 8% 최종 판정: 0%	23,833	한국의 업계 및 정부 대응으로 인도 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
3	선재 (말레이시아)	24,000 (예상치)	대한제강 재심 전: 25.20% 최종 판정: 0%	6,048	대한제강 수출품이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 조사 대상 제외
4	신문용지 (말레이시아)	18,000 (예상치)	재심 전: 43.24% 최종 판정: 0%	7,783	10년간 부과한 반덤핑조치 연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 일몰재심 중단

4) 각 상품 연간 수출액에 변경 전 · 후 관세율 차이를 곱한 액수로서 실제 액수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납부하지 않게 된 비용을 의미

5	코팅지(남아공)	549	예비 판정:17.25% 최종 판정: 0%	95	예비 판정 때 17.25% 덤핑마진율이 산정되었으나 한국 업계 및 정부의 대응으로 최종 판정 때 무혐의 결과 도출
6	강연선, 로프, 케이블(남아공)	7,747	재심 전: 50.33~79.76% 최종 판정: 0%	6,179	남아공 정부는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7	강철사 (유럽연합)	85,088	재심 전: 60.4% 최종 판정: 0%	51,393	한국의 업계 및 정부의 대응으로 중국산 강철사에 대한 우회덤핑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
8	폴리실리콘 (중국)	327,554 (2013)	제소자 주장: 48.77% 최종 판정: 2.4%~12.3%	159,748	일부 우리 기업은 제소자 주장 마진(48.77%)보다 훨씬 적은 수준(2.4~12.3%)의 마진 부과
9	도색아연도금 강판(태국)	46,440 (2013)	원심: 13.82% 재심: 0%	6,418	반덤핑 부과 제재 대상에서 우리 기업(유니온스틸) 제외
10	고무노화 방지제(인도)	3,325 (2013)	원심: 25% 재심: 0%	831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결과 추가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
11	폴리염화비닐 (파키스탄)	2,569 (2013)	조사 종결	-	조사 개시 후, 2014년 5월 파키스탄 국내 산업 피해 규모 미미를 이유로 조사 종결
12	철강후판 (미국)	47,537 (2013)	재심 전: 1.64% 최종 판정: 0%	780	상계관세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동국제강에 대해 0.11%의 미소 마진 판정
13	평면코팅판지 (파키스탄)	90 (2013)	최종 판정: 22.24% 최종 판정 효력 종료	20	최종 판정 당시 위원 1명이 임기를 넘긴 상태로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최종 판정 효력 종료
14	플라스틱 가소제 (콜롬비아)	7,033 (2013)	예비 판정: 18.93% 최종 판정: 0%	1,331	최종 판정 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15	SDY (인도네시아)	25,580 (2013)	제소자 주장: 15.72% 최종 판정: 0%	4,021	최종 판정 시 덤핑마진율 계산 오류 인정, 관세 미부과 결정
16	스판덱스 (인도)	12,587 (2013)	제소자 주장: 25% 최종 판정: 0%	3,147	최종 판정 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없이 조사 종결
17	무방향성 전기강판 (미국)	4,000 (2013)	예비 판정: 0.59% 최종 판정: 0.65%	-	상계관세 최종 판정 시 예비 판정과 동일한 미소 마진 유지 * 반덤핑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세율(6.8%) 부과
18	유정용강관 (캐나다)	5,069 (2013)	예비 판정: 0.1~0.7%	-	상계관세 예비 판정 시 미소 마진 판정, 조사 종결 *현재 반덤핑 조사 진행 중

19	상업용 타이어 (브라질)	80,624 (2013)	제소자 주장: 67.88% 최종 판정: 7.1%	49,003	예비 판정 시 산출된 반덤핑 관세율에서 번복하여 최종 판정 관세율 하향 조정
20	콘크리트 철근 (캐나다)	31,261 (2013)	예비 판정: 0.3-3.8% 최종 판정: 0%	-	최종 판정 시 보조금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상계관세 미소 마진 판정 * 반덤핑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13.3%) 부과
21	방향성 전기강판 (미국)	4,687 (2013)	상무부 판정: 5.34% ITC 판정: 0%	250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산업 피해 최종 판정에서 산업 무피해 결정
22	변압기 (호주)	7,991 (2013)	제소자 주장: 30.7% 최종 판정: 0%	2,453	최종 판정 시 한국산에 대해 관세 미부과 결정
	총계			**332,392**	

3 경제협력진흥외교

1) 우리 기업의 대규모 사업 수주 및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외교부는 정부의 역할이 큰 중진국 · 신흥국 대상의 정상외교, 경제공동위 등 주요 고위급 외교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카자흐스탄 발하슈 화력발전소 등 양국 정상외교 이후 우리 기업들의 약 382억 달러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지원하였다.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알제리 가스처리 시설(약 8억 달러) 수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약 64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2014년 한 해 동안 총 660억 달러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를 달성하는데 직 · 간접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지역에서 수주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해외 수주 정보 제공 및 입찰 활동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국제회의를 대한민국 투자설명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정상 순방 행사 때에는 유망 투자자 참석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보건 의료, 방산 수출 등 특정 분야별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1월 외교부-복지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위급 회의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는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각각 초계함 및 경공격기 수출이 성사되는 등 방산 수출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향후 방산 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다층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방산 협력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역시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의 노동 관련 법규 ·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외 취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하여 취업박람회 개최, K-move 멘토 구성 등을 통해 취업 ·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시행, 협정국가 확대를 통해서는 해외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을 통한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 활로도 모색하고 있다.

2) 우리 기업의 해외 애로 사항 해소 지원

외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상시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척 활동 지원, 각종 시장정보 제공,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들의 애로 사항 해소, 현지 법률 조언,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각 재외공관에 주재기업과의 협의체인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 · 운영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기업담당관'을 지정, 우리 기업들의 현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고 주재국과의 경제 협력 증진 방안 모색에 진력하고 있다. 2014년 재외공관의 미수금 회수, 관세절감, 시장개척 지원 등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절감한 비용은 수치화가 가능한 사항만 해도 3,500만 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 · 관 합동 경제협력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틈새시장 등에 파견하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수입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10여 차례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4년에는 13개국에 총 10회의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는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및 총영사회의를 맞아 공관장과 기업인 간의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를 경제 4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대사 및 총영사가 직접 기업인들과 1:1 상담을 실시하면서 해외시장 정보 제공,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기업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참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요청으로 연례행사화 되었으며, 상담 건수와 참여 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 현황

연 도	재외공관장 회의	주관 경제단체	일 자	참여공관 수	참여기업 수	상담건수
2014	공관장회의	전국경제인연합회	4.3	114	261	631
	총영사회의		4.30	45	84	148



재외공관장과 기업인 1:1 상담(2014.4.3)

2011년부터는 재외공관 주도로 현지 진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책사업 수주, 방산 물자 수출 지원, 비즈니스 애로 사항 해결 등을 내용으로 57개 공관에서 57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현지 진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외교부는 또한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공관이 주도하여 현지 한국상공회의소(KOCHAM: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 해외 한국 기업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주브라질 대사관 주도로 2012년 11월 설립되어 2013년 9월에 법인 등록을 완료한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의 경우 2014년에도 안정되도록 계속 지원하였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재외공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CSR 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주재국 정부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CSR 활동 내용을 홍보하며, 주재국 정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이 CSR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에는 36개 공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국제기구 및 CSR 선진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이 사업을 더욱 발전 ·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4 한 · 인도네시아 CSR 포럼
(2014.12.16, 자카르타)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2008년부터 6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래 2014년에 대상 재외공관 수가 21개로 확대되었다. 우리 공관은 현지 법률회사 또는 법률자문가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재국의 회사 설립, 청산 절차, 노동 관련 법규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령 문의에 조언해 주고 있다.

2004년부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

기업중앙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의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 자력으로 시장 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농림부와도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 이후 매년 세계 각국 주재 한국 재외공관에서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엔 조달시장 설명회(2014.10.22)

외교부는 또한 2007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등과 함께 민 · 관 합동으로 '유엔 조달시장 설명회'를 15차례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서는 유엔조달관의 유엔 조달시장 현황 및 벤더 등록절차 등 설명, 유엔조달관과 희망 기업 간 1:1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 해외시장 정보 제공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입수한 각국의 경제 동향, 박람회 및 입찰 정보 등을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최근시장정보란을 개설(2013.10), 해외 시장 정보를 게시 ·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이메일링 현황

(총 64개 기관, 2014.12.31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입찰 정보	40	33	24	41	43	60	53	34	43	37	28	26	462
행사 정보(박람회 등)	11	9	1	3	2	2	5	6	2	7	2	4	54
경제 동향	12	16	20	22	19	17	28	25	22	30	15	20	246
합계	**63**	**58**	**45**	**66**	**64**	**79**	**86**	**65**	**67**	**74**	**45**	**50**	**762**

2001년 12월부터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란을 개설, 우리 기업들의 주재국 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1:1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한 해 동안 167개 공관에서 1,128개의 기업 문의에 대응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통상 환경을 분석 · 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하였으며, 2013년 판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명의로 발간하여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5)]

또한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이후 「통상 마찰 ·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을 2010년까지 매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기업들의 현지 진출 · 정착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사례들을 포함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5) 「외국의 통상환경」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한 '무역장벽보고서'(1권),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 상계관세 및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금융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등 15개 분야별로 각국의 통상장벽 관련 정보를 분석, 정리한 총론적인 성격의 '분야별 통상환경'(1권)과 아시아 · 대양주, 아메리카, 아프리카 · 중동, 유럽 등 4개 지역의 국가(총 83개국)별로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무역 · 투자 관계, 각종 통상장벽 현황 등을 분석, 정리한 각론적 성격의 '지역별 통상환경'(4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절

다자 경제 외교

1 중국 베이징 APEC 정상회의 참석

제22차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14년 11월 10~11일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APEC 출범 25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 · 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Pacific Partnership)'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경제통합 진전', '연계성과 인프라 개발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를 통해 역내 기업인과 APEC 정상들 간의 관심 경제 사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정상들은 68개 항의 정상선언문과 4개 부속서, APEC 25주년 기념 정상선

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APEC 정상들이 '아 · 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합의한 것이다. APEC 회원국은 FTAAP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지 FTAAP에 대한 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를 실시해서 2016년까지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의 FTA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FTAAP 역량 강화 사업도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APEC 정상들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라는 생산과 공급이 상호 연결된 세계 경제의 최근 현상을 감안하여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GVC 참여 지원 등 사업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진전을 지원하고 '신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5년까지 역내의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목표에 합의하고 분야별로 세부 행동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APEC 회원국은 앞으로 에너지 · 정보통신기술(ICT) · 교통 인프라 개발 등 물리적 연계성, 통관 개선 등 제도 연계성, 기업인 이동, 유학 촉진, 관광 원활화 등 인적 연계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PEC 정상들은 구조개혁, 중진국 함정 극복, 인터넷 경제 촉진,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블루 이코노미), 친환경 개발(그린 이코노미) 등에 관해 지속 논의하면서 기술이전 · 확산 · 상용화, 고용, 보건, 식량안보, 여성 경제 참여, 재난 방지, 반부패, 도시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제고키로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경제통합 진전' 세션에서의 선도발언을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의 가속화가 아 · 태 지역 성장 동력 발굴에 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하

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AP 실현을 기대하면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을 지지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2~2014년 성공리에 추진된 '역내 FTAAP 실현을 위한 1단계 역량강화사업'을 바탕으로 2015년 이후 3년간 2단계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역내의 더 많은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 사업'을 제안, 참석한 정상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다양성을 지닌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연계성 증진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APEC 연계성 청사진' 채택을 지지하고 연계성 증진을 위한 구체 방안으로 'APEC 교통카드' 도입과 정부가 인정한 무역업체에 신속 통관 등 편의를 상호 제공하는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역내 체결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 · 태 지역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혁신과 성장 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APEC 회원국들이 규제개혁 성과와 모범사례들을 공유해 나갈 것을 제안, 각국 정상들의 공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도 참석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APEC은 지난 25년 동안 아 · 태 지역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무역투자 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4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또 역내의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한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APEC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 무역 · 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진전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 경제 각 분야 협력 외교 기반 구축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 정책 구현을 위해 주요국과의 창조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을 계기로 북극 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한 투자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등 경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왔다.

1) 창조경제 구현 지원

세계 6위의 과학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은 우리 경제 성장과 도약의 핵심 자원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헝가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2014년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혁신 및 기업가정신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 같은 해 5월 미국 워싱턴에 문을 연 글로

벌 혁신센터를 통해 현지 창업 지원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3월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 간 창조경제 및 혁신 분야 협력에 합의,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협력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10월에는 프랑스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신산업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11월에 한 · 프랑스 신산업기술협력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미국,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는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및 개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 미국, 중국, 스위스, 브라질, 베트남, 뉴질랜드와 과학기술 공동위를 개최하여 연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거점 공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24회의 창조경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였다.

2) 북극권과의 국제 협력 강화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에 정식 옵서버로 가입한 이후 북극 활동 수행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북극이사회에서의 북극 환경 보전 및 과학연구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두 차례 개최된 북극이사회 고위관리회의에 참석, 북극 과학조사 활동 동향을 파악하였다.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작업반 및 태스크포스 회의에도 우리 전문가들이 총 16회 참여하여 기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북극이사회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해 왔다. 2014년에는

캐나다(3월과 9월 두 차례), 미국(4월), 덴마크(10월)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극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해 합의하였다. 2014년 9월에는 북극항로의 서쪽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북극이사회의 회원국인 노르딕 5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과 최초로 한 · 노르딕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북극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북극 관련 국제포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2014년 1월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 회의,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제2차 북극 서클(Arctic Circle)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을 소개하고 참석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2014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의 북극 관련 글로벌 의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극이사회 회원국 등과의 양자 협력 강화 및 북극이사회 회의에 지속 참여, 북극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3) 투자보장, 사회보장 등 경제 관련 협정 체결 및 개정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때 직면할 수 있는 비상업 위험(예: 수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 및 기업을 보호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하여 왔다. 2014년에는 한 · 중 · 일 투자보장협정이 5월 17일 발효된 가운데 미얀마와는 6월 5일 투자보장협정에 서

명하였다. 가나, 파푸아뉴기니,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 국가와는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또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해외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14년에는 한 · 스위스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한 · 핀란드 사회보장협정 및 한 · 퀘벡 사회보장 양해각서(MOU)를 타결하였다. 이러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파견 근로자 및 기업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국민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 진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국 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2014년에는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되었고, 홍콩 및 케냐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다.

주요 국가와는 항공협정 체결 및 개정 노력을 통해 이들 국가와 인적 · 물적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항공업계의 운용 효율 증진 및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도모하여 왔다. 2014년 9월에는 2009년에 가서명된 캐나다와의 항공협정을 수정, 정식 서명하였다. 요르단, 헝가리 등과는 항공협정을 개정하였다. 타지키스탄, 세르비아와는 신규 항공협정문에 합의하였다.

3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대응

지난 2013년 미국과 EU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미흡한 제재 수준과 통제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으로 불법 어업 행위 대응에 노력해 왔다. 특히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개선 조치를 양자 회의 및 재외공관 등을 통해 미국 및 EU 측에 적극 설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국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의 개선 조치에 대해 예비적이지만 긍정 평가하는 판정을 내렸으며, EU는 당초 2014년 6월 말로 예정된 결정 시점을 2015년 초로 연기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개선 조치가 제도화되어 감을 긍정 평가하였다. 정부는 미국과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최종 해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